

역대 최대 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2025년에 총 992건, 668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사업자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도 전수 조사해 2.8조원 국고로 환수
- AI, 클라우드 중심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 전면 쇄신 추진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기획실 강영규 실장 주재로 2월 25일(수)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 안건 : 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점검 계획,
②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
③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
④ 차세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BPR/ISP) 추진 방안,

[① 부정수급 적발건수 역대 최대, 합동현장점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적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를 활용해 부정으로 의심되는 10,780건을 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총 992건, 667.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다. 이는 작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이다.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특히,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현장점검은 317건, 497억원을 적발하여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체 적발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총 106건의 점검대상 중 97건(251억원)을 적발하여 적발률이 91.5%를 기록하였다.

* 점검절차: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및 부처 통보(기획처) → 부처 자체 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기획처·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 실시 → e나라도움에 점검 결과를 등록(부처)

<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¹⁾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정징후 추출건수	4,291	7,175	3,853	4,243	4,603	7,521	8,079	10,780
부정수급 적발건수	18	154	132	231	260	493	630	992
적발금액	169	2,497	3,147	3,488	9,807	69,985	49,302	66,765
부처 자체 점검	4,261	7,117	3,813	4,143	4,273	7,121	7,629	10,265
적발 건수	16	146	121	176	178	324	381	675
적발 금액	153	1,483	2,530	1,912	2,400	37,557 ²⁾	3,997	17,059
합동현장점검	30	58	40	100	330	400	510	606
(특별현장점검)	(-)	(-)	(-)	(-)	(-)	(-)	(60)	(106)
적발 건수	2	8	11	55	82	169	249	317
(특별현장점검)	(-)	(-)	(-)	(-)	(-)	(-)	(56)	(97)
적발 금액	16	1,014	617	1,576	7,407	32,418	45,305	49,706
(특별현장점검)	(-)	(-)	(-)	(-)	(-)	(-)	(15,295)	(25,071)

1) 소관 부처의 부정수급 등록 기준.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경찰수사·행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 318억 9천만원의 부정수급을 부처 자체점검으로 적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률이 높은 부처 합동현장점검을 작년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늘린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이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매년 100건 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감독 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부정수급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은 만큼 작년 1,000명에서 올해는 1,500명 이상으로 교육 목표를 높여 잡았다.

[② 방치된 보조금 집행 잔액도 전수 조사해 국고로 환수]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지방정부 집행사업은 3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잔액은 다음 연도말까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정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정산이 끝났음에도 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 지방정부, 부처의 계좌에 쌓여 있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방치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보조금 잔액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총 1조 7천억원을 국고로 환수했고, 2025년도에도 1조 7백억원이 넘는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올해도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 중 작년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한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에 3월말까지 사업별·지방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하였다. 매주, 매일 반납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독려하고, 분기별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별·지방정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잔액이 반납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 담당 직원들의 잦은 인사와 업무 미숙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국 7개 센터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에 직접 방문해 반납절차를 안내하고, 보조금 정산·반납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2025년 7만 명 수준에서 2026년에는 8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③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관리 및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에 부처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관서 장의 필요조치 사항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명시하였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합동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항을 심의·확정하며, 각 중앙관서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 정산 지연 또는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새로 추가하였다.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의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재이월되며 발생하는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재이월이 가능한 요건으로 ‘계약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처가 재이월 승인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과 반복적 이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④ AI, 클라우드 중심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재구축]

현재 사용하고 있는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도에 개통되어 9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e나라도움과 연계된 다른 시스템은 118개에서 311개로 2.6배가 넘게 증가했고, DB는 1TB에서 58TB로 58배, 스토리지는 5TB에서 547TB로 109배가 증가하였다. 시스템은 노후화되고 사용량과 데이터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AI, 클라우드 등 기술환경도 급속히 변화했다. 통상 정부시스템의 내구연한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e나라도움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6년 예산으로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BPR/ISP를 완료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뒤 2030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1년 1월 1일부터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e나라도움’의 구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전 과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보조금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T 인프라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정보 자원의 확장성, 유연성,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현재는 지방정부 집행사업, 교육청 집행사업, dBrain을 통한 집행사업 등은 e나라도움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끝나면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으로 전송해 관리하는 체계다. 자금도 각각의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도 관리 되지 않고, 보조금 잔액이 반납되지 않아도 정산이 완료되어 e나라도움으로 통보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금 흐름도 파악이 어려웠다. ‘차세대 e나라도움’에서는 모든 보조금 집행과 자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부정이 중대한 사안은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부정수급액의 5배), 고발, 환수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면 사업 전면 재설계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에서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는 보조사업 평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보조금 정산과 잔액 반납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소중한 국민 혈세를 계좌에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내고, 관련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차세대 e나라도움’이 AI 시대 정부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책임자	단 장	임영진 (044-214-3370)
		담당자	사무관	박미경 (gabkyung@korea.kr)
	재정성과국 성과제도혁신과	책임자	과 장	권기정 (044-214-3230)
		담당자	사무관	박표민 (tablemin89@korea.kr)



1.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24년 7월 ~ '24년 12월 집행된 보조사업

* 점검 절차: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 부처 자체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 (부처·기획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 → e나라도움에 점검결과 등록(부처)

2. 2025년도 점검 결과

□ (적발 실적) 부정징후 의심사업 총 10,780건 중 992건(667.7억원) 적발, 이 중 합동 현장점검 500건으로 220건(246.4억원) 적발하였고, 특별현장점검 106건으로 97건(250.7억원) 적발

○ 특정거래관리, 가족간 거래가 적발 건수 최다(비중 77.5%^{건수기준}), 통계 모델, 특정거래관리가 적발금액 최대(비중 70.3%^{금액기준})

<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결과* (단위: 건, 억원) >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적발건수(건)	18	154	132	231	260	493	630	992
적발액(억원)	1.7	25.0	31.5	34.8	98.1	699.8**	493.0	667.7

* 부처 등록 기준, 경찰수사·행정소송·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699.8억원 중 318.9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 2026년도 점검 계획

□ 부정징후 의심사업 총 10,000건 추출 및 합동현장점검 총 600건 실시 등 역대 최대 규모 점검 실시

○ 합동 현장점검 600건*(부처·지자체 요청사업 포함)

* 적발률 높은 분야(문화·관광, 보건·환경, 농림·수산, 국토·산업)를 중심으로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격월 통보 후(4, 6, 8월) 현장점검 실시

○ 부처 자체 점검률 저조한 기관 대상 특별점검 100건 이상

참고 2

'25년 e나라도움 부정수급 분야별/패턴별 점검결과

□ 분야별 점검 결과

(단위: 건, 억 원, 금액 기준)

사업분야	적발건수	적발금액	사업분야	적발건수	적발금액
합 계	992	667.7	보건	14	6.5
농림수산	66	210.6	통일·외교	3	3.5
환경	84	154.6	통신	3	2.2
문화 및 관광	134	140.6	교통 및 물류	5	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1	131.3	일반·지방행정	3	0.5
사회복지	38	9.9	교육	3	0.4
국토 및 지역개발	17	6.9	공공질서 및 안전	1	0.005

□ 패턴별 점검 결과

(단위: 건, 억 원, 건수 기준)

부정징후 유형	적발건수	적발금액	비고
특정거래 관리	647	213.2	수의계약 조건위반, 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가족 간 거래	122	13.3	임직원 직계존비속 거래 등
집행 오·남용	83	23.1	사용 제한 업종에서 결제, 임차료를 구매가의 2~4배 집행
통계모델*	59	256.5	예치형 경상·자본보조 학습모델 등
기타 사업관리	42	104.8	사업 종료 후에도 미정산인 사업
지출증빙 미비	17	15.1	견적서 1장 (집행액≠견적가) 증빙으로 거액의 자금을 자기계좌로 이체
급여성 경비	16	4.2	허위, 휴직인력 인건비 지급 등
자산 관리	6	37.5	중요재산 무단 담보제공 등
계	992	667.7	

※ 부정수급 적발과 관련된 모든 세부내역을 기계학습 시킨 후 점검대상 중에서 부정 소지가 큰 사업을 선별해내는 탐지 모델

□ 구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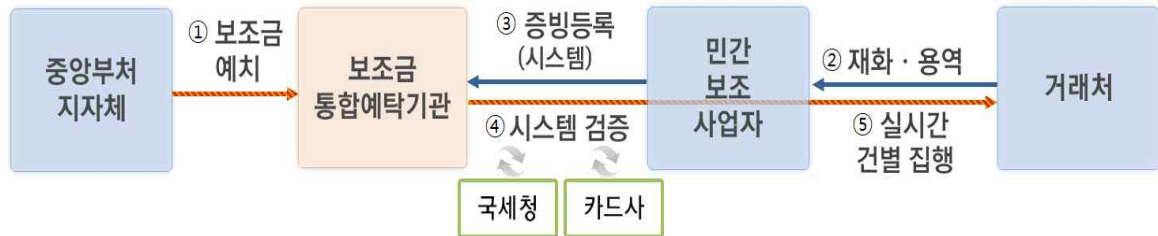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의 쏠 처리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로 통해 국민 편의·투명성 확보('17.7월 개통)

<추진 경과>

- ▶ ('15.5) 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결정
 -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규정 마련(총리훈령 653호, '15.10)
- ▶ ('16.2~12)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설치·운영근거 마련
 -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스템 법적 근거 마무리('17.5)
- ▶ ('17.1) e나라도움 내 예산편성·교부·집행 등 주요 기능 1차 개통
- ▶ ('17.7) 정산관리, 통계분석, 부정수급,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

□ 주요 기능

- ① (보조금 관리 강화) 보조금 업무 쏠 처리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고, 보조금 통합 예치를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 관리 구현



- ② (부정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DB를 통합 및 전부처 공유하여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 기능 구현

-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부처에 통보('18.8월부터 가동)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

- ③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공개) 보조사업별 수행 및 개개 국민별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조 사업 운영 현황·성과 공개